

학생운동의 현재적 역할과 미래적 의의

유 초 하

충북대 철학과 교수



1. 대학생의 사회적 권리와 의무

전 체 인구 중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라고 한다. 거칠게 통계치를 추정할 때 현재 20대 후반인 대학 졸업자는 동년배 인구의 25%, 재학중인 20대 대학생은 동년배의 30% 정도가 될 것이고, '97~'98년 이후 입학할 '80년대 출생자는 동년배 집단의 40% 정도가 대학생이 될 것이다. 일인당 국민소득 등의 경제력 지표로 보아 한국이 독일·프랑스·일본보다 더 높은 비율로 대학생을 양성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은 아

니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못한 일임에 틀림없다. 이토록 우리 사회에 대학생과 대학출신 인구가 많은 것은 원천적으로 고졸자와 대졸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우에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고졸자는 대졸자에 비해 보수가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승진할 기회는 비교가 무의미할 만큼 낮고, 피고용 상태를 안정되게 유지하기조차 어렵다.

대학 출신자와 대학생은 동년배 집단 중 혜택받은 상대적 소수집단이다. 적어도 대학생은 대학에 다닌 적이 없는 동년배보다 높은 사회적 대우를 받을 개연성이 높다. 이 점에서만 하더라도 대학생 집단은 자신들이 받을 대우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살아

가는 동료 인간들에 대해 빚지고 있다.

대학생을 키우는 데에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대학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가령 국립대의 경우 학생이 내는 등록금의 2배를 약간 상회한다. 시설비를 포함한 국립대의 교육비는 절반 남짓 정부재정이 담당하는 만큼 학부모의 경우 자신이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 대학교육의 80%를 담당하는 사립대학은 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등록금으로 운영된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액수가 국립대 등록금의 2배 남짓 되는데, 그 등록금이 대학 운영의 경비 거의 전체를 충당한다. 결국, 국립대나 사립대나 간에 학생 1인당 투여되는 교육비용은 비슷한 셈이다. 대부분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대학 입학을 위해 고교 졸업 때까지 투입한 비공식 경비는 학교 납부금의 몇 배가 된다. 거기다가 생리적·법률적으로 성인 나이의 대학생이 생산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만큼 전체 사회가 그만큼 생산력의 손실을 겪게 된다.

여기서 대학생은 학부모뿐 아니라 전체 사회에 대해서까지 부채를 진다. 대학생을 양성함으로써 사회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적극적 비용 곧 교육투자와, 소극적 비용 곧 노동손실에 대해 대학 출신자는 보상할 의무가 있다. 물론 그 보상이란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로 사회적 생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대학 출신자의 생산노동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만큼은 여전히 그 부채가 탕감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생은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자기형성 과정에 있다. 그 시기는 본인에게는 경제적 소득추구를 유예하는 기간에 해당하며, 사회의 입장에서는 현실화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유예-잠재화하는 기간에 해당한다. 달리 말해 대학 생활은 개인적으로는 더욱 큰 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능력 내지 자격을 얻기 위한 시기이며, 사회적으로는 더욱 높은 생산을 이루기 위한 훈련의 시기이다. 대학생이 습득하는 지식과 기술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소득추구를 유예한 대가로 지니게 되는 개인적 능력-자산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가 그의 생산능력을 가동하지 않은 대가로 증가시킨 사회적 잠재력-자산이다. 개인 속에 깃든 능력은 그러므로 순수히 개인의 자산이 아니며, 사회에 환원해야 할 몫을 포함한다.

2. 대학생이 누릴 사회비판의 자유와 한계

대학생은 대학사회의 성원이면서 동시에 국가사회의 성원이다. 또한 대학생은 대부분 생리적·법률적으로 성인이지만, 사회생활의 실제에서 성인인 것은 아니다. 이처럼 대학생의 지위에는 서로 다른 여러 측면이 내재되어 있다. 대학생의 권리와 의무는 이들 측면에 따라 서로 달리 규정되어야 한다.

먼저 대학생은 교수·직원과 함께 대학사회의 구성주체로서 대학사회 안에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담지한다. 수강할 강좌와 교수를 선택하는 것도 스스로 결정하며, 강의 수강-학점취득 이외의 대학 생활 전반의 설계도 또한 스스로 진행한다. 학생자치구를 구성하는 선거권·피선거권을 지니는 것은 물론 대학생 사회의 현실분석과 미래 건설, 대학사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일정한 수준에서 참여하고 개입할 자

격을 지닌다. 그 참여와 개입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교육적 관계에서 학생은 지도 받고 규율되는 입장에 서는 까닭에서이다.

또한 대학생은 대부분 법률적·제도적 의미에서 성인이라는 점에서 국가사회의 정당한 주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사상·표현의 자유에 포괄되는 학문연구·발표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는 기본적 자유권으로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권·피선거권·공직감시권·공무담임권은 성년국민에게 보장되는 국가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에 속한다. 이들 자유와 권리를 지닌 성년국민으로서 대학생 또한 정부의 정책이나 권력행사에 대해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법률적 요건을 갖추는 한 정부기관의 공직을 담당할 자격을 지닌다.

한편, 대학생은 국가사회의 예비적 주도 주체로서, 미래의 본격적 삶을 위한 준비-훈련의 과정에 있다. 대학생은 자기연마의 과정에 있는 만큼은 국가사회에 대한 현실적 주체가 아니며 온전한 성인이 아니다. 법률적·형식적 의미의 성인이 사회적·실질적 의미에서는 온전한 성인이 아닐 수 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성인이라는 것은 사회적 생산과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생산참여는 성인으로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고, 의사결정 참여는 성인으로 인정됨으로써 허용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의사결정에의 참여는 생산활동에의 참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다. 즉, 정치적 권리행사는 경제적 의무수행의 대가인 셈이다.

대학생 사회, 대학사회, 국가사회에서 대학생이 놓인 위치의 성격은 대학생이 수행

하는 역할의 성격을 규정한다. 동시에 소속된 이들 세 단계의 사회에서 대학생은 서로 다른 지위를 지닌다. 대학생은 대학사회에서는 등렬적 성원으로서 자기형성·자기결정의 권한을 지니되, 대학사회에서는 차등적 성원인 피교육자로서 제한된 자유·권리를 지니며, 국가사회에서는 생산주체집단의 예비적 성원으로서 경제적 의무수행을 유보받는 동시에 정치적 권리행사를 제한받는 것이다.

학생운동은 대학생이 공통으로 동시에 속한 세 가지 단계의 사회에서 똑같이 펼쳐질 수 있다. 그 가운데 대학생 사회에서의 집단적 자기개혁운동에 관해서는 다른 사회계층들의 입장이나 의견과는 무관히 펼쳐지는 것이고, 대학사회에서 학생이 지닐 자율권이나 국가사회에서 대학이 누릴 자주권을 옹호하는 학생운동에 대해서도 대학 바깥 사회의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다만, 정치성을 진하게 띠는, 국가사회에 대한 비판운동의 경우 다른 사회계층들과의 관계에서 조정되고 제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대학생이 국가사회에 대해 지닌 이중적 지위는 교수에게도 적용된다. 교수는 학문과 무관한 맥락에서 자신이 속한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합법적 주체단위집단이면서 동시에 학문적 맥락에서는 현실주도세력들의 직접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변경인(邊境人) 내지 일종의 국외자이다. 교수는 연구, 교육, 사회봉사라는 세 갈래 임무를 진다. 교수의 사회봉사에 대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된다. 현실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에 대해 처방을 내리며, 그 처방이 현실주도세력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처방에 조응하는 실천운동에 나서서

것은 교수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에 속한다. 경제정치적 사회주도세력은 교수집단의 현실비판적 발언을 저지하고 억압하기보다 존중하고 반영하는 쪽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문화적 현실에 대한 교수집단의 비판과 대안 제출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교수집단은 일반사회와의 관계에서 일종의 특권을 누리는 셈이다. 교수집단이 누리는 '상아탑'적 특권은 현실사회의 정치경제적 관계에서 직접적 권력담당자로 역할하지 않거나 못한다는 주·객관적 한계와 교호적으로 대응된다. 교수집단의 이러한 지위와 역할, 권리와 의무는 넓게 보아 지식인 일반에게 공유되며, 그 지식인에는 대학생도 포함된다.

3. 한국 학생운동의 역사와 현실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학생운동이 수행해 온 기능은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승만 독재를 축출한 4·19 혁명을 비롯하여 학생운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역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대한민국 성립 이후 중요한 정치적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학생운동은 권력의 부정과 비리에 항거하여 진실을 밝히고 옳은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국민여론의 길잡이가 되었다. '80년대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취된 대부분의 정치적 진전 또한 학생운동의 직·간접적 결실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화를 거부하는 정권의 합법적 폭력에 맞서는 도덕적 물리력의 점에서 학생운동에 비견될 만한 부문운동은 별로 없었다. 지금까지 특히 '90년대 이전까지 민족자주·민중민주 운동세력 가운데 학생운동만큼 치열하

고도 끈질긴 운동을 펼친 집단은 거의 없다.

한국사에서 학생운동은 오랜 전통과 무거운 비중을 지닌다. 14세기 고려말 이후 19세기말 조선까지를 통틀어 성균관 학생들이나 사류·유림의 여론은 당대 정치역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15~16세기 조선의 사림 내지 사림 출신 관료들은 생산주체인 다수 사회성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세습적·독점적 정치권력·경제권력에 대항했고,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조선의 정치적·문화적 자주성을 옹호하여 외세의 간섭에 저항했다. 멀리 거슬러가면 9~10세기 신라의 육두품 출신 유학자와 유학적 관리들 또한 당시 신라사회의 대내·외적 현실에 대해 비슷한 기능을 수행했다.

대한민국 이후 한국사회에서 학생운동이 수행한 기능은 시대배경이 다른 만큼 훨씬 더 적극적이다. 학생운동은 독재정권 축출과 독점권 해체 및 식민주의 외세 추방을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이어져 왔다. 우리사회에서 학생운동은 집권세력의 정책향방은 물론 국민대중의 여론형성과 정치적 의식화에까지 중대한 변수로 작용해왔다. 오늘날 학생운동이 맞서는 대상은 정세국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기본적 성격은 신라말기 유학관료나 조선초기 사림파가 척결 또는 극복하고자 했던 대상과 크게 보면 서로 통하는 데가 있다. 예나 지금이나 학생운동은 한국사회를 건강하게 개선하고 민중과 민족의 주체성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4·19 혁명은 '60년대 제3세계 반독재투쟁의 선두운동으로 기록된다. 그에 앞서 3·1 운동이 중국의 5·4 운동을 촉발시켰다는 것은 중국인들에게도 사실로 인정된다. 3·1 운동이나 5·4 운동은 반봉건-반외세 민족

주의 민중운동이라는 공통의 특징을 지니지만, 그 전개과정에서 학생들이 담당한 몫이 매우 컸다는 점 또한 공통적이다. 이렇듯 한국의 학생운동은 국내에서는 다른 부문운동에 앞서 반민주적 금력과 권력의 물리적 장애를 돌파하는 선봉역을 수행하고, 국외적으로는 독재정권의 억압이나 제국주의의 침탈로 고통받는 모든 피압박 민족·민중에게 자기해방을 향한 실천적 노력의 모범을 보여왔다.

'80년대 이후 학생운동 집단은 자신들을 '민주화의 발파공' 또는 '민주화의 교량자'로 인식해왔다. 억압적 금권·정권에 맞서 민중세력의 선봉부대로 나서서 희생을 무릅쓰면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뚫어냄으로써 민중세력 본류의 투쟁실천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여러 다른 민주운동 부문들의 연대와 역량 통합에 기여했다는 뜻이다. 여기서 학생운동이 '민주화의 교량자'라는 규정은 썩 어울리는 것 같지 않지만, '민주화의 발파공'이라는 말은 그런대로 인정될 만한 표현이다. 다만, 앞에서 말한 '성인의 조건'으로 보아 대학생은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은 본격적 성인이 아니며, 그만큼 자신의 위치에 함축된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학생운동의 주장들은 성인운동의 경우보다 발언의 무게가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 한데 고려말-조선초 성균관 학생은 오늘날의 학생처럼 유보된 삶을 살아가는 수련생이 아니다. 현대식으로 본다면 그들은 이를테면 엘리트 관료로 진출하기 위한 연수코스를 이수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엄밀히 볼 때 고려-조선의 성균관 학생들의 운동은 오늘날의 학생운동과는 다른 데가 있다. 즉, 오늘날의 학생운동은

성균관의 학생운동을 성인 이전의 단계에 포함되는 방식을 통해 부분적으로 계승하는 셈이다.

4. '70년대 학생운동과의 차이점

전대협-한총련으로 이어지는 '80~'90년대 학생운동은 '60~'70년대 학생운동과 비교할 때 나름대로 발전해온 것은 사실이다. 우선, 전국 규모의 총학생회 연합기구로 모습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도 학생운동의 조직적 발전에서 한 획을 긋는 일이 된다. 아울러 '80~'90년대 학생운동은 현실사회의 성격과 역사발전상의 위치에 대한 조망을 지니게 되었고,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각 부문 민중운동 세력들과의 연대 속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대학졸업-사회진출 이후 개인적 삶이나 전체 사회의 진로에 대한 책임있는 프로그램을 그려내는 데까지 주목하게 되었다.

한편, '80년대 이후 학생운동의 이러한 '발전'은 매우 강조할 만큼 중요한 의미나 의의를 지닌 것이 아니다. 우선, 그 발전은 사회 전반의 민주화가 진전되는 데 따른 요소적 현상일 뿐이다. 학생집단이 순수히 독자적인 역량과 방식으로 유별나게 성취한 것이 아니다. 다음, 그 발전은 현재적 양상의 학생운동을 불변적 과제로 상정할 때 결과적으로 성립하는 개념이다. 학생운동의 당위적·현실적 위치에 대한 원천적 반성을 통해 보면 진정한 발전은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내용을 지닐 수 있다. 나아가 '80년대 이후 학생운동은 '70년대 이전 학생운동의 정신과 분위기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선배의 유산을 객관상

황적 요인으로 인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주체적 의식 한계로 인해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점은 불행한 일이다.

'60~'70년대 학생운동은 훨씬 느슨하고 낭만적인 운동이었다. 전업적 활동가도 별로 없었고, 장기적 일상투쟁 과제도 별로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가령 한일조약 비준반대, 삼선개헌 저지, 군사교육훈련 강제시행 반대 등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비례적 다수의 학생들이 비교적 단시간 내에 모여들었다. 집회의 양상도 약간은 다른 점이 있었다. 지휘부와 대중이 확연하게 갈라지기보다는 비교적 넓은 정서적·논리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평상시 학교생활에서 운동권 지도부와 학생대중이 정치적 주장의 일반적 근거나 학생사회의 일반적 분위기를 공유한 데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학생운동의 지도부와 대중이 확연하게 갈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운동권 소속 여부를 떠나서 '60년대나 그 이전 시대의 학생들은 이데올로기와 투쟁실천을 공유하는 냉철한 동지애와 함께 진한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따뜻한 인간적 우정을 공유했다. 같은 캠퍼스에 다니는 학생들이끼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친 학교간 유대도 폭넓게 형성되었고, 선·후배간의 관계도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사상원칙·정치노선상의 차이가 없지 않았으나, 정파간에 생활상으로는나 운동실천상 갈등하기보다 화합하고 연대하는 편이었다. 선배들의 운동실천이 산출한 성과나 부작용은 모두 사실대로 후배들에게 넘겨져서 지나간 실천결과에 대한 비판/극복/지양이 서로 다른 그룹들 사이에서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학생들이 거리에 나서면 시민들이 공감하였고,

여론 또한 명시적·암시적으로 학생들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그 시대에는 언론 또한 귀족화·보수화·재벌화하지 않았던 만큼 학생운동의 의도와 목적을 왜곡하거나 매도하는 일도 별반 일어나지 않았다.

30년 전의 대학생은 동년배 집단의 10%에 훨씬 못 미치는 소수집단이었다. 그만큼 일반인들이 그들에게 미래의 엘리트로서 거는 기대는 컸고, 그들 자신 졸업 후 노동자가 된다는 의식을 별반 갖지 않았다. 그에 비해 오늘날 대학생이 개인적·집단적으로 놓인 현재위치와 미래전망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적이다. 개인의 사회진출을 놓고 볼 때 어떤 의미에서 오늘의 대학생은 30년 전 대학생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동년배 속에서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전망이 더욱 어둡다는 뜻이다.

오늘날 학생운동이 예전에 비해 달라진 것은 그보다 먼저 대학생의 지위와 성격이 달라진 데서 연유할 것이다. 대학생은 동년배 인구의 30%에 이를 만큼 이제 회소가치를 누리는 집단이 아니다. 대학생은 미래의 엘리트가 아니라 예비노동자이다. 가능성 엘리트이되, 그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낮아졌다. 사실 대학에 진학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선택이 부모나 교사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현실상황에서 유효하게 잔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취직을 위한 과외공부에 매달려야 할 판이다.

학생운동이 한국사회의 민주화=정치발전 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순수했기 때문이다. 대학생 집단은 사회현실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지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을 함께 갖추고 있다. 학생운동이 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은 기성사회의 이해관

계로부터 자유롭다는 데서 온다. 학생운동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펼쳐진 적이 별로 없었다. 아무리 시대적 경쟁상황이 각박하더라도 학생운동은 도덕적 순수성을 상실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5. 전대협 - 한총련이 남긴 문제들

학생운동이 이제 침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학생운동의 침체는 사회운동 일반의 침체와 대응된다. 학생운동의 침체는 민중운동 침체의 한 특수양태이다. 재야세력과 학생세력의 민족민주운동이 처한 침체 내지 퇴조의 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보수적 분위기에 뿌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운동세력에 도사리고 있는 주체적 문제들 또한 그러한 침체나 퇴조의 주요한 요인이다. 주체의 입장에서 본 내부문제는 정세인식, 사상원칙, 정치노선, 전략전술, 투쟁방식, 내부이견과 그에 대한 공동처리방법 등의 모든 수준에 걸쳐 있다. 이들 가운데 원칙적 논리의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앞부분의 것들이고, 현실적 실천에서 먼저 극복되어야 할 것은 뒷부분의 것들이다.

전민련 - 국민연합 - 전국연합으로 이어지는 '80~'90년대 민족민주 민중운동에서 노정된 주체적 문제는 학생운동에도 부분적 책임이 있다. 전대협 - 한총련은 일견 일사불란한 전국적 단일대오를 형성하여 나름대로 성실히 투쟁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공적과는 별도로 몇 가지 중요한 과오 내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형식적·절차적 측면에서 소속 대중의 관심과 의견을 모아내고 반영하는 올바른 민주체계를 갖추지 못했으

며, 내용적·실질적 맥락에서 시대와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확한 노선을 확립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핍과 과오는 당면과제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다수파의 정치적 의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데에 주로 기인한다.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는 정과간 구분 없이 모든 학생운동 주체들이 함께 해야 할 몫이 있다.

실질적 측면에서 학생운동의 주류는 전대협 결성 이전부터 한총련 결성 이후 최근까지 제도권 정치집단과의 범민주연대에 주력해왔다. 그러한 '전술'적 고려가 현실운동 속에서 지닌 의미는 보수야당 추종주의 이상일 수 없었다. 특히, 강령과 정책대안뿐 아니라 사업추진 수단까지를 야당에 따르거나 야당에서 빌려오는 불건강성이 노정되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상원칙과 정치노선에서 현장투쟁방식에 이르기까지 '주체사상'을 받드는 비주체적 자세를 고수했으며, 반미자주화와 통일지상주의에 매달려 민중의 삶이 당면한 근본모순으로서의 계급관계를 소홀히했다.

절차와 방식의 측면에서도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학생운동은 민중운동의 전위를 자임함으로써 과장된 언사와 자기과대라는 왜곡된 행태가 일종의 관습 내지 문화를 이루었다. 의장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사회운동주체들이 보기에 민망하고 거슬릴 정도로 영웅적 찬사를 바쳤다. 연설에서는 물론 일상언어에서까지 남한의 언어현실에 맞지 않는 북한식 용어를 선호하고, 문건들에 나타나는 주장내용과 어투에서 주체사상적 표현방식이 빈번히 사용된다. 단위학교별 회장들의 모임인 총회가 최고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학생대중과 다양한 소수정파들의 의견이 무시되었다. 주요행사

때마다 공권력 집단과 불필요한 폭력대결을 관성적으로 벌이기도 했다.

학생운동이 시대적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대협 이래 노정되어온 이러한 문제점들을 청산 극복해야 했다. 학생운동은 객관적 상황과 그 변화가 요구하는 바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 '96년 연세대 사태에 이어 '97년 출범식 사태로 빚어진 한총련의 존폐 위기는 적어도 학생운동의 미래를 놓고 보는 한, 원천적으로 학생운동 주체 편에서의 철저한 반성과 자기비판의 결핍에서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한총련 중앙위원을 비롯한 학생운동 주도 그룹은 '97년 출범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경 1인과 프락치혐의 민간인 1인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과 정부를 향해 일체의 변명이나 호도함이 없이 철저하고 진솔하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학생대중과 국민대중의 일상적 정서와는 거리가 먼 '정권퇴진'이나 그 성취를 위한 '전민항쟁' 등의 구호를 앞세우는 언어적 과격성은 절제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학생운동 주체들은 우리 사회의 진보변혁과 민족의 자주평화통일을 성취할 민중운동의 선도투쟁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술적 고려'라는 명목 아래 보수정치세력과 연계됨으로써 민주와 진보의 실질적 내용을 방기하는 목표상실의 자기당착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더욱 근원적으로는, 방송으로 들은 내용을 운동실천의 지침으로 삼는 행태와 그 속에 깃든 지적 무성의와 나태를 청산 극복해야 한다.

6. 미래를 위한 반성의 지점들

학생운동은 객관적 상황과 그 변화가 요구하는 바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학생운동 주류는 '87년 이후의 어떤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보수야당과의 연대라는 발상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이었음을 철저히 자인하고 반성해야 한다. 여기서 바람직한 학생운동은 몇 가지 점에서 규정될 수 있다.

우선, 학생운동은 학생의 주체성에 바탕해야 한다. 학생운동은 학생 아닌 세력에 대해 금전과 노선 등에서 의존하는 연계를 탈피해야 한다. 또한 학생운동은 내부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학생운동의 모든 결정은 각 단위 학생사회에서의 대중적 합의 내지 지지에 바탕해야 한다. 나아가 학생운동은 단기적인 집단적 권익을 생취하려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생운동은 민중의 권익과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데에 원칙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학생운동은 구체적 실천에서 사회운동 일반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설익은 이념이나 편향된 노선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한편, 보수야당과의 연대라는 '전술'이 '원칙'까지를 손상시켜온 것 이상으로 주체사상에의 경도는 우리 사회 변혁운동의 정당성을 훼손시켜왔다. 여기서도 학생운동은 몇 가지 점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우리 사회 변혁과 민중적 민족통일은 민중의 주체적 실천을 통해서만 접근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북한 권력은 진정한 의미의 민중권력도 사회주의 정권도 아니

며, 남한 경제권력·정치권력과 의 범기득권 연합의 방식으로 타협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셋째, 변혁운동은 어떠한 기득권 세력과도 연계됨이 없이 철저히 남·북한 민중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96년 8월의 연세대에서 벌인 한총련 통일투쟁과 '97년 5월의 한총련 출범식에서 발생한 프락치혐의 민간인 사망사건이 언론과 정부의 공세에 의해 '폭력운동'으로 매도되고 무엇보다 국민대중에게 부정적 인상을 주게 됨으로써 한총련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약화를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학생사회의 공식적 대표기구인 한총련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대응은 민주화의 진전을 실천적으로 회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폭압적 '작전'이라는 우려와 유감을 자아내었지만, 이들 사태와 관련하여 한총련으로서는 반성할 점이 없지 않다.

민중주체의 민주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운동은 원래의 의지가 왜곡 당하지 않도록 세심히 노력해야 한다. 원칙과 노선에서 근본주의적 지향을 상실하거나 방기하면서 운동적 표현의 방식에서 과격성을 띠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생산의 주체와 정치의 주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근본주의는 지켜져야 하고, 그 실현에 접근하는 실천적 표현에서는 대중의 정서·의식과 객관적 정황을 고려하는 다양한 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대학생의 자유와 권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정당한 일이다. 본격적 사회인이 아니라고 해서 주장 제출의 일반적 근거(rationale)나 사회생활의 일반적 분위기(morale)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관행이나 풍습도 나름의 존립근거가 있는 법이다.

한총련과 학생운동 주도주체들은 이번에 겪은 시련을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입에 쓴 약'으로 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주적 대학생 자치기구의 정당한 재건을 위해, 그리고 민주화와 진보에 올바르게 기여하는 학생운동의 재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충고를 열거함으로써 글을 끝맺고자 한다.

- ① 학생운동은 민중운동의 한 부문이다. 미시적으로 볼 때, 학생운동은 먼저 계층적 특성을 공유하는 주체들이 벌이는 하나의 부문운동이다. 학생운동은 민중운동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운동일 수 없다. 정치적 사안만이 학생운동의 주제일 수도 없다.
- ② 학생운동은 정치과잉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권퇴진/반미자주화/통일 등 대학생이 생활과 실천에서 그 실현을 직접 감당할 수 없는 큰 이야기들에 대해 거리를 두고 공부해 나가는 한편, 환경/여성/의료/언어/예술/교육/복지 등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③ 학생운동의 정치적 방침은 제도권 권력 집단 사이의 민주-반민주 대립구도나 상대적 민주진보성에 따른 등급 매기기의 구태의연한 발상을 깨뜨리고 나와 민중의 편에 확연히 서는 입장의 전화를 이루어야 한다.
- ④ 학생운동은 학생사회의 이익실현과 합리화를 향한 부문운동의 몫을 수행해야 한다. 학생사회의 경제·정치·문화적 문제들을 자신의 과제로 수용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만 민중연대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물론 학원의 자주민주화만이 학생운동의 과제일 수는 없다. 다만, 학생집단으로서의 독자적 부문운동 없이 민

중연대운동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 ⑤ 학생운동은 전위운동이 아니다. 변혁운동 전반에 대한 지도력은 물리력을 핵심으로 하는 주도력에 바탕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이제 학생운동은 노동운동과 달리 물리력의 중심일 수 없고, 주도력의 중심일 수 없는 만큼 지도집단일 수도 없다.
- ⑥ 학생운동은 학습운동이다. 각자가 사령탑이 되려는 무반성적 의식을 버리고, 실천을 통해 배우며 틈을 내어 공부하는 겸허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 ⑦ 조직의 형식과 실제활동이 조응해야 한다. 대중적 의견분포에 충실한 결론을 승인하는 일과 뒤쳐진 대중의사를 끌어올리는 일이 변증법적으로 통일돼야 한다.
- ⑧ 근본주의의 핵심을 견지해야 한다. 보수화의 물결이 밀려드는 혼란의 시기일수록 사상원칙과 정치노선상의 근본주의와 과업설정에서의 계급성의 핵심을 견지해야 한다.
- ⑨ 대중운동의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 원칙과 노선에서의 근본주의는 대립과 연대의 다양하고 유연한 전략전술·투쟁방식과 짝함으로써만 올바르게 유지된다.
- ⑩ 학생운동 내부의 토론과 상호비판을 일상화한다. 좁은 정치적 의견그룹의 관점을 벗어나서 운동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다면, 상대방의 입장과 자신의 과오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 진전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⑪ 학생운동가들의 다양한 사회진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역사에 대한 책임 이전에 가족관계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시대적 현실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적 실천을 쌓아올려야 한다 면, 그에 앞서 자신과 가족의 일상생활을 재생산해낼 바탕을 확보해야 한다.

⑫ 대학생 집단은 원칙적으로 미래에 대해 열려있는 입장에 있으나, 개연성의 수준에서는 일차적으로 미래의 노동자이며, 현재로서는 지식인적 요소를 지닌 소부르주아계층이다. 학생운동 주체들은 현재로서 자신을 노동자와 동일시하는 이데올로기적 태도에 집착하기보다 졸업 이후 본격적 사회인으로서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태도를 지녀야 한다. 학생운동은 자체로는 민중운동의 주도집단일 수 없다는 자기각성에 입각한 긴장된 반성만이 학생운동과 그 주체를 민중적 변혁운동의 중심부로 끌어올릴 수 있다. ■

유초하/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철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강원대·고려대·동국대 강사 등을 거쳐 현재는 충북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민교협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사상사의 인식』 등이 있고, 『동서양의 철학적 전통과 실천적 비판』, 『정약용의 우주관』, 『동서의 철학적 전통에서 본 육체』, 『조선후기 성리학의 사회관』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